

CEO 동정

반기문 UN사무총장 초청 조찬 간담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주최로 열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서해선 실시설계VE로 약 212억원 예산 절감

- 경제적인 설계기준 적용, 시공방법 개선 등 -

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제4, 5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실지 송신방식 변경(제어케이블→폐쇄제어 통신회선)으로 8억원, ▲본선 보조케이블 변경(동케이블→광케이블)으로 4억원 등이었다.

주요 예산절감 내용은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한 정거장 배선규모 최적화로 7억원, ▲전차선 높이 및 공동관로 규모 축소를 고려한 터널 단면적 최적화(76.1㎡→70.7㎡)로 40억원, ▲교량 유지관리시의 이동 점검통로 폭 축소(2.1m→1.4m)로 23억원, ▲교각점검시설 및 대피계단 최적화로 9억원, ▲교량 기초 하부 형상 변경(사각입방체→변단면)으로 11억원, ▲가시설 규격 및 현장말뚝 최적화로 11억원, ▲터널 라이닝 철근강도 변경으로 8억원,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선 및 변전건물 규모 조정(3층→2층)으로 6억원, ▲부하개폐기 설치 최적화 및 지중배전선로 연동선 케이블을 알루미늄 케이블로 변경하여 10억원, ▲터널 조명등 설치간격 조정으로 6억원, ▲교량 구간 절연접지선 변경 및 전



철도설계지침 개정

- 이용객수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기준 마련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 이용객수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이용객의 쾌적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철도설계지침(건축/감수시설편)을 일부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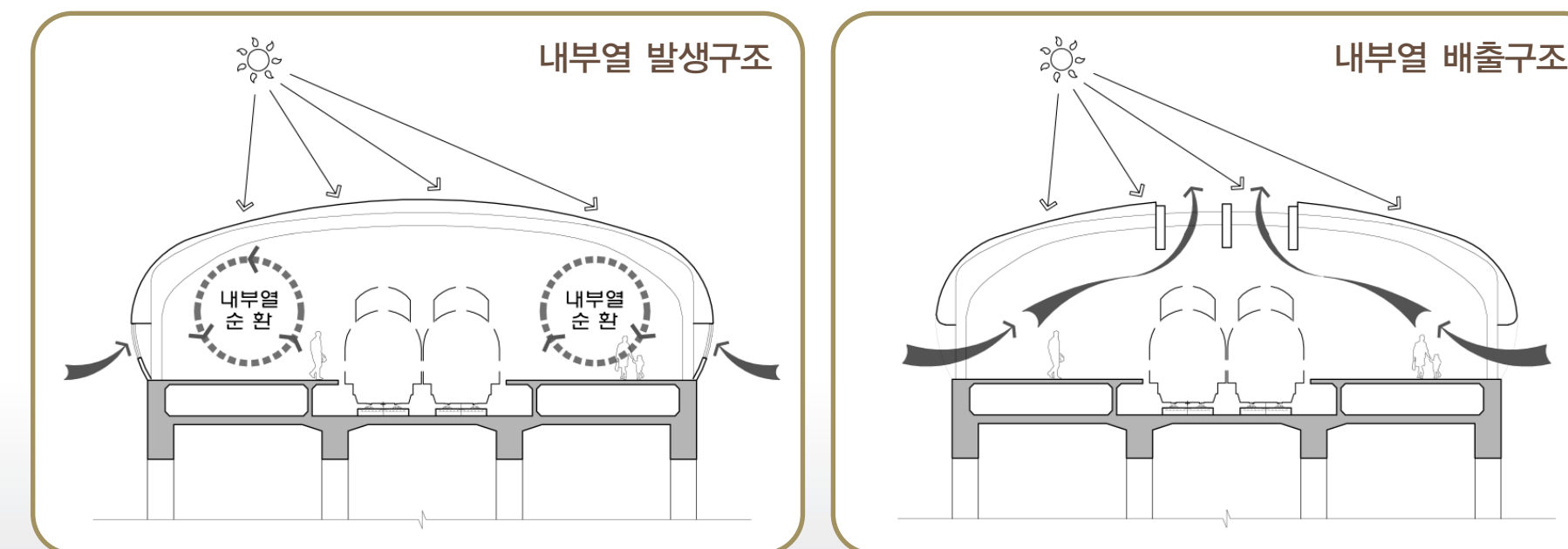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용객수를 고려한 광역철도 여객화장실 규모조정(위생기구수 재산정) ▲돔(Dome)형식 홈지붕의 내부 환경 개선 ▲승강장 홈지붕 태양광설비 설치 ▲선하역사 누수방지(E·J부분) 대책 ▲고상 승강장 시·중점부 연결통로 설치 ▲지하연결통로 표면결로 방지 대책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라니스(EPMS) 및 홈페이지(열린정보)에 게시하였으며, 설계사 및 현장직원 등에 대한 전파교육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조사를 통한 Feed-back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는 철도 이용객 위주의 경제적인 설계기준 정립을 통해 설계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도설계기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혁신본부 신우재 기자)

■돔(Dome)형식 홈지붕의 내부열 배출 개념도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보호 강화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공익신고 접수 -

공단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화 경쟁 등 공익의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11.9.30)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중이다.

또한 권익위에서 선정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중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관련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042-606-3169), 공단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억 원까지 주어진다.

이번 규정 제정은 부조리 근절과 내·외부 청렴도 향상,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공단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신고 업무가 활성화 되면 하도급 거래, 철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부패행위에 대한 One-Strike Out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행위가 사라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부패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업무를 외부에 맡겨 처리하는 "HELP-LINE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PMP Renewal - The New World' 워크숍 개최

- 자격증 유지에 필요한 정보 안내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20일 본사 사옥 교육장에서 PMI 아시아, 태평양 서비스센터 직원을 초빙하여 본사와 충청본부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PMP 갱신과 관련된 워크숍(PMP Renewal - The New World)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영문으로 작성된 관련 자료와 웹사이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참석하신 직원들은 PMP 자격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개별상담을 통하여 시연된 회원정보변경, 자격갱신, 자격증 사본 출력 등은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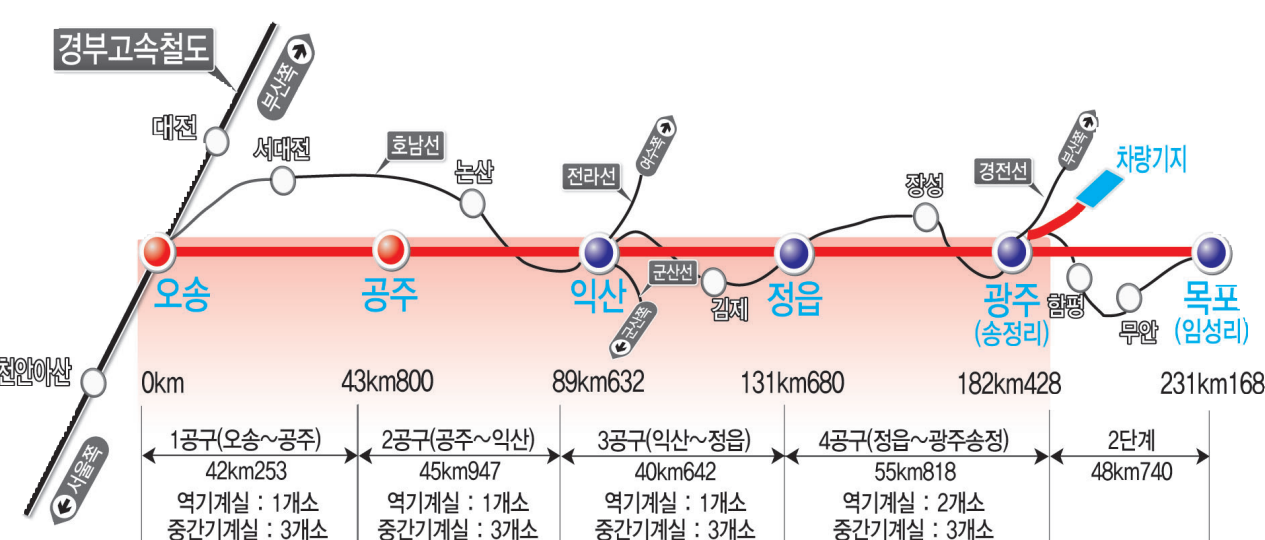
※ PMP 자격은 매 3년 마다 교육활동과 PM업계 공헌 활동을 통한 60PDU(전문성 개발 단위) 이상의 취득을 필요로 한다.

(건설본부 김경연 기자)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 총 사업비 591억원 · 4개 공구 분리발주 -



공단은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간)의 신호설비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는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장설비와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총 532억원 규모의 공사이며, 오송~광주, 광주~익산, 익산~정읍, 정읍~광주송정의 4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한다.

총 591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은 3개 공구로 나누어 오송~광주, 익산~광주송정 2개 공구를 발주하며, 나머지 광주~익산 구간은 철도공단이 직접감독을 시행하여 기술력 축적은 물론 예산 절감(약 20억원)에도 기여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특정회사 편중 낙찰방지를 위한 '1사 1공구 낙찰제' 등을 적용하여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신호설비 신설공사는 9월에 시공사를 선정,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4년도 말에 호남고속철도를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건설 안전사고 업체 · 청렴계약 위반 업체 제재 강화

-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시행 -

공단은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청렴계약 위반시 해당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고, 철도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패행위 등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감리원(또는 기술자)과 해당 감리 또는 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3점씩 감점한다. 또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감리 또는 설계 업체는 11월 10일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